

#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서울 회의를 앞두고

July 13, 2010

이 동 휘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양상을 띠는 한편, 남유럽을 중심으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 문제가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2010년 6월 26~27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2008년 11월 개최된 워싱턴 정상회의 이래 4번째이다.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금융 분야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상 선언문’(Summit Declaration)과 이를 더욱 구체화한 3개의 부속서가 채택되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우선시하는 유럽 국가들과 경기부양 지속을 중요시하는 미국 등 국가들 간의 이해 상충, 은행세 도입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이견 존재,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는 일종의 안도감 등의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의 재정 적자 절반 축소 및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의 안정화 또는 하향화 계획이 마련되고, 상당수의 주요 합의 사항—예컨대, 협력체계(Framework), 금융 분야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FSN), 개발 등 주요 분야—의 의미 있는 결론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오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토론토 정상회의는 “과도기적 성공”(transitional success)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가 이전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의 재정 악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불균형 상존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데 합의하였다. 나아가 정상들은 합의한 정책 대안들을 협력체계(Framework) 속에서 다루어 나가기로 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시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함으로써,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그 협의체로서 G20의 유용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개발 문제와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의 의제화에 대해 정상들이 합의한 것은 기존의 G20 의제들 중 상당수가 서울 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된다는 중요성에 덧붙여, 서울 회의를 G20 발전의 분수령적 계기로 만드는 동시에 금번 토론토 회의의 성격을 서울 회의로의 연속성을 확보한 과도기적 성격의 회의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게 관찰된 점은 6월 25~27일간 3일 동안에 연속적으로 개최된 G-8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상호 연관성이다. G-8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초점은 평화와 안정, 개발 및 모자보건(maternity and child health) 등의 비경제 분야에 뒀으로써 G20과 일정 수준의 차별화가 시도되었다. G-8이 그간의 국제경제 문제에 대한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냉전 종식 전후로 다루기 시작한 안보 문제를 주된 관심 영역으로 하게 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G20의 경제 협의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로써 단중기적으로는 G-8과 G20이 일정한 역할 분담의 토대 위에서 병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G20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는 ‘주체(누가), 의제(무엇을), 방안(어떻게)’ 다루어 나가게 될 것인가의 세 범주로 분류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주체(누가) 확정의 문제이다. 현재 G20 정상회의는 19개 국가와 EU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

수의 국제기구와 함께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적인 측면(with-out)과 대내적인 측면(with-in)에서 회원국 구성의 문제와 함께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수의 국가들이 스스로를 선정한(self-selection) 조직이라는 지적과 함께 EU 국가들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데서 발생하는 유럽의 과다대표성(over-representation)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G-7 그룹과 소위 “BRICs”로 일컬어지는 그룹 간의 경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둘째로, 의제(무엇을) 확대의 문제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감에 있어서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change of)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체제의 보완적 개선(change within)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가 완화될 경우 G20의 존재이유(raison d'etre)가 점차 상실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G20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 외에 개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또 다른 경제 문제이면서도 기존의 G-7/8 국가들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의제들을 점차 다루어 나감으로써 존재이유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방안(어떻게), 즉 제도 혁신의 문제이다. 경제 회복에 따른 위기감 축소와 G20에 대한 관심 저하, 최근 점증되고 있는 상당수의 정상회의에 대한 피로감(summit fatigue)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G20의 향후 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유럽 발 재정 위기에 따라 나타나는 위기감은

G20이 착수한 국제경제 체제의 개혁이 좀 더 강도 높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함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구심점으로서의 G20의 상설 사무국 설치 등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금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는 비G-8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자,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례화가 결정된 이후 G-8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라는 점에서 향후 G20의 발전을 가름하는 분수령적인 성격을 띤다.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회원국 구조의 불명확성, 유럽 국가들의 과다 대표성 등 회원국 구성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G-8 정상회의는 정치·안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G20 정상회의는 경제 관련 문제를 분업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가운데, G20의 발전 및 위상 공고화를 위한 적정 과제(예: 개발, 금융안전망,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분간 병존하게 될 G-8과의 협력 관계 구축 차원에서 G-8 상시 초청 방안, G-8·G20 세르파 연석회의 등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G20은 G-8을 훨씬 상회하는 회원국 수 때문에, 현실적으로 G-8의 장점이었던 비공식성과 정상 간의 친밀한 대화 등을 통해 국제 현안을 다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G20이 발전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투명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회의 준비 외에 기록 보존과 사후평가 업무 등을 아울러 수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설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비용·고효율’ 차원에서 회의 준비는 현재와 같이 Management Troika가 해 나가되, 기록 보존과 평가 및 기타 업무 지원은 특정 장소의 상설 조직이 담당케 하는 이원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1월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 역량을 시험받는 기회가 되느니만큼, 제반 이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소위 “비전 그룹”(Vision Group: VG)을 선정하여 장기발전 계획을 서울 회의에서 시작하여 2012년 멕시코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만하다. <끝>

IFANS 2010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are not to be construed as representing those of IFANS.”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Nambusunhwanro 2572, Seocho-gu, Seoul 137-863, Korea  
Tel. (02)3497-7764 Fax. (02)571-103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t.go.kr](mailto:ifans@mofat.go.kr)